

민주 “강만수 해임·FTA 저지” 총공세

11일 당원 결의대회...“중부세 폐지, 좌시 안해” 강 장관 퇴진 안하면 예산안 심의 거부할 수도

민주당의 대외 공세가 활발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당 소속 의원 40여명 등 당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만수 해임 촉구 및 중부세 폐지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당원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 법안 중에 중부세를 폐지하려는 것이 악법 중 악법”이라며 “중부세 폐지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중부세는 조세정의에 합치하고 지방과 수도권 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교육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자원”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부세를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강 장관 말처럼 헌법재판소와 기획

재정부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우리는 국회 조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오는 18일까지는 국회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재는 선고기일을 연기해야 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후에 선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10개월간 고환율, 고물가로 민생경제를 파탄 내고 신뢰하기 어려운 정책을 남발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린 강 장관 파면을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연말(개각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강 장관을 비롯한 내각을 전면개편해 국민과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강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앞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 FTA의 선(先) 비준은 국익을 훼손시킬 최악의 선택으로, 선 비준 하더라도 미국 의회가 움직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비준을 강행한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만수 장관 파면 및 현재선고 연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면 단호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진 의원 등 외교통상통일 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 대책 후 비준’과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의투위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는 등 한나라당이 비준안 상정을 계속 추진하면 모든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기로 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은 강 장관의 해임 압박을 계속하

는 한편 강 장관의 ‘현재 접석’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강 장관의 퇴진과 예산안 심의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 장관이 퇴진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 안 서는 민주 중앙당

〈승〉

‘쌀 직불금’ 의혹 소명 요구에 단체장·의원 1명도 출석 안해

민주당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의심되는 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중앙당에 출석, 소명을 요구했으나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아 중앙당의 영(令)이 서지 않는 망신을 당했다.

11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진상조사 특위’는 지난 주말 그동안의 자체 조사를 통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지난 10일 저녁까지 중앙당에 출석, 소명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10일 저녁까지 중앙당에 출석한 당 소속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단 1명도 없어 특위는 어쩔 수 없이 출석 방침을 철회하고 서면으로 소명 기

회를 주기로 했다.

또, 특위에서는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지는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쌀 직불금 진상조사 특위 위원인 김영록 의원은 “지난 주말, 급작스럽게 연락을 취해 당사자들의 출석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본인들의 해명보다는 현장 조사가 우선일 것 같아 일단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받고 추후 당 차원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정국에서 당 지도부의 무기력 등이 겹치면서 당의 기강이 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즉,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당의 미래 비전 부재 등이 겹치면서 당의 조직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안희정 ‘뉴레프트’ VS 정책 ‘뉴민주당 선언’

민주 ‘노선 논쟁’ 본격화

지지를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노선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11일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 노선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없어 활력이 없다”고 전제한 뒤 “안희정 최고위원이 ‘뉴레프트’를 주장했고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당 현대화의 모습을 담은 ‘뉴민주당 선언’ 초고를 조만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당 노선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그

래야 국민이 (민주당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 내 개혁그룹인

‘민주연대’가 당 현대화 구상에 대해 버리고 있다고 들었다”며 “뉴민주당 선언 초고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당 통합은 어느 정도 됐다”며 “민주연대와외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당의 노선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구상하는 당 모습은 참여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비판,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노선에 서자는 것. ‘좌’에 가까운 민주연대와는 차이가 있으며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새로운 진보’ 정도를 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 FTA 재협상 준비해야”

盧 전대통령 “상황 변했으면 다시 검토하는 것이 실용외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권의 한미 FTA 비준 논란과 관련,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라는 글을 올리고 “한미 FTA를 살려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준에 앞서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인가 ▲우리 입장에서 재협상이 필요 없는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先)비준과 관련, “우리 국회 가 먼저 비준에 동의하면 과연 미 의회도 비

준에 동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비준을 한다고 해서 미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우리가 재협상을 하지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과 다를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비준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번 일일 뿐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이라

며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간 협정 체결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미 FTA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행히 금융제도 부분에 그런 것이 없

다고 해도 지난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해 아쉬운 것들이 있을 것”이라며 “아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대해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번 정기국회내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의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원색적인 비난은 자제하면서도 2건의 논쟁을 통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조기에 처리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가운데 한미FTA를 이끌어낸 노 전 대통령이 ‘재협상론’을 꺼내든 진정된 배경을 이해하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